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유치 배경·전망

# 우주항공산업 발전 이끌 선도사업 큰 기대

## 내년 상반기 구축 대상지역 판가름날 듯...분야별 지역특화육성 촉구

국토교통부가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채택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예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수행자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

9개월의 용역이 끝나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대상지가 결정되는 만큼 유치경쟁에 뛰어들 전망이다. 경남도 등 지자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진국 수준 비행시험 인프라 정부가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는 국내에 항공기(중·대형) 비행시험평가와 부품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비행시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전 세계 항공 관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개발 중·대형기, 헬기 등의 비행성능 시험이 가능한 장비와 활주로 등 기반시설 확충은 필수 조건이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총사업비 8천억원)의 사업내용은 통제동과 연구동, 관제탑, 각종 장비, 활주로(2.4km) 신설 등으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업 내용에 대해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있

다. 다만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에 필요한 시설이 공항과 동일한 만큼 예산 절감을 위해 전국적으로 폐쇄된 공항 3~4곳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고흥항공센터 활용 폭 커 고흥만간척지에는 현재 고흥항공센터가 있다. 2002년~2009년 총 2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고흥항공센터는 0.7km의 활주도와 비행선·무인기·헬기 시험동 등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비행선과 소형·무인 항공기 시험 뿐만 아니라 나로호 2단로켓 추력 시험도 이뤄졌다. 또 한국형헬기개발사업(수리온) 착륙장치 낙하시험동도 있다. 스마트무인기 개발 장소도 이곳이다. 즉, 현재 국내 핵심 비행시험은 대부분 고흥항공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고흥항공센터 기반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다. 2016년까지 2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0.7km인 활주로를 1.2km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고흥항공센터의 존재는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으로 이어진다. 전남도도 항공센터 단계별 발전계획을 통해 1단계(2000~2009년) 항공센터 구축, 2단계(2012~2016년)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에 이어 3단계(2014~2020년)로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구축을 제시

하고 있다.

고흥항공센터가 '국가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된 만큼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역시 고흥에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항공우주연구원이 2002년 '고흥이 국내 비행시험 조건 절대 우수 공역을 구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도 고흥 유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경남 사천의 여건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 전남 유치의 최대 복병은 경남 사천으로 꼽힌다.

아직 사천이 본격적인 유치 움직

임을 드러내진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전남도는 사천의 여건이 만만치 않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사천에 '항공기산업단지클러스터'를 추진키로 했다. 법적인 뒷받침도 끝난 상태다.

사천에는 항공기 부품제조 및 완제품 생산업체 등이 밀집해 있다. 국내 항공기 관련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항공기 산업과 비행 시험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천에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가 구축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고흥과 달리 사천은 공역이 충분치 않다는 게 결정적인 단점이다. 현재 사천에서도 일부 비행 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민항기·군항기의 이·착륙이 많은 지역이어서 시간대가 국한돼 있다.

전남도는 항공분야 연구기관 및 업체 등이 특정지역에 편중돼 지역간 산업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살려 분야별(전남=비행시험, 대전=연구·설계, 경남=생산)로 집중 육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흥이 갖고 있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만간척지에 자리잡은 고흥항공센터 전경. 지난 2009년 완공된 고흥항공센터는 0.7km의 활주도와 비행선·무인기·헬기 시험동 등을 갖추고 있다.

## “과학경시대회 파문은 인재”

박인화 시의회 교육위원장 '전문직 기강 해이' 지적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과학경시대회에서 성적 처리를 잘못해 입상자가 무더기로 뒤바뀐 어처구니 없는 사태는 '인재'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18일 오전 위원장실에서 관련 경과보고를 받고 "시교육청 과학경시대회 파문은 단순 점산처리 오류가 아닌 인사시스템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일 중학생 238명, 고등학생 191명 등 모두 429명이 참여한 '제25회 중·고등학교 학생 과학경시대회'의 입상자 재검점 과정에서 107명의 점수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입상 취소 32명, 등위(금·은·동) 변경 22명, 신규 입상 33명 등 총 87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수상자에 대해 2만~5만원의 상품권을 부상으로 수여했으며, 수상이 취소된 학생들에게는 5천원 상품권을 주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경시대회의 재검점 및 입상 결과는 담당과장 정경로 처리되는 사안이지만 정작 대회 당일 담당과장은 외부 출



장을 간 상 대였고 재검·편철위원을 제외한 책임자는 담당 교육전문직 장학관과 장학사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대회 당일 재검을 끝마치고 학부모들의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10일이 지나서야 오류를 발견했다.

아울러 최초 입상자 발표 전까지 7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책임있는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재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이뤄졌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교육전문직의 책임감, 성실성 부재와 근무기강 해이가 불러온 인재였던 것이다.

박 위원장은 "초등교사 임용 시험 관리 부실로 시험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지 불과 5달만에 또다시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을 단순한 점산 착오로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며 "특정조직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다 보니 본청 내에서도 '복지부동'의 풍토가 만연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민기자 kim777@kjdaily.com

## 전국기초의장協, 5·18 왜곡 규탄 결의문 채택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인천에서 제172차 시도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5·18 민주화운동 왜곡·편향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동찬 광주5개구 의장단협의회장이 제출한 결의문에는 5·18에 대한 일부 종편 방송의 역사 왜곡 프로그램 방영과 인터넷사이트 '일베'의 악의적이고 도를 넘은 비방에 대해 정부의 강력 대처와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교육현장에서부터 철저한 민주·인권·역사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역사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광주시당(위원장 임내현)은 19일 오후 8시 총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5·18 역사 바로세우기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18 역사의 참뜻을 알리고 편향·왜곡된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민과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모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당은 5·18 왜곡과 관련해 8개 권역별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지난달 29일에는 종편방송사인 TV조선과 채널A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김종민기자 kim777@kjdaily.com

## “F1은 실패한 사업” 직격탄

유근기 도의회 예결위원장 작심 발언 “적자폭 못줄이면 박지사도 사퇴해야”

전남도의회 유근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전남도의 F1대회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며 대회를 중단하던지 적자폭을 100억원대로 줄이지 못하면 박준영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늦게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이 시간, 이 발언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며 F1대회를 거론했다.

유 위원장은 "700억원, 600억원, 누적적자 1천700억원 등 큰 적자 이야기만 듣다 보니 (올해 예상적자) 200억원, 300억원에 대해서 무대전 것 같다"며 "단언컨대 F1은 실패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결위에 참석한 배용태 행정부지사에게 F1의 실패원인을 물은 뒤 스스로 3가지 이유를 제시했

다.

유 위원장은 "첫번째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곡성에서 2시간이 걸리는데 수도권, 강원, 부산, 충청권에서 누가 오겠느냐"며 "두번째는 정부 무관심으로 세게 3대 스포츠라고 하는데, 정부에선 동네잔치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꼬집

었다.

또한 "잘못됐다면 돌아갈 시점이 있어야 한다. 해도 해도 안되는 걸 계속해서 진행할 이유는 없다"며 "박 지사도 본인이 F1을 유치했기에 스스로 중단하기 힘들다고 본다. 직언할 참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F1 대회를 중단하던지, 적자폭을 100억원, 150

억원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면 박 지사도 직을 사퇴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내 스스로도 직을 내려놓겠다"고 폭탄 발언까지 했다.

한편, 이날 유 위원장의 발언 직후 열린 계수조정과 삭감 조서 작성 과정에서도 진통이 이어졌으며 F1개최권료 300억원의 가까스로 예결위를 통과했다.

/김재정기자 j2k@kjdaily.com



“진정한 선진일류 국가, 조심조심 코리아가 필수입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조심조심 코리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오늘입니다.

하지만 우리 일터에서는 하루에 6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250여명이 큰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일터에서 흘린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심조심 코리아가 진정한 선진일류 국가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정경혁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반부패 경쟁력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